

## 투데이 칼럼

## 한국 문화에 빠진 북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철자한 고립을 택한 북한 사회 조차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을 비켜갈 수는 없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영화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 당국의 적개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국가가 나선다고 주민들의 한국 문화 접촉을 막을 수는 없다. 최근 북한이 접경 지역 등지에서 대북 전단과 함께 발견된 물품이이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초코파이, 견빵 같은 과자류와 연고, 진동제, 구충제, 해열제, 속옷과 여성용품 등이 한 꼬리미에 들어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전단을 보내 단체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는 대외선전 매체에서는 상표를 그대로 노출시킨 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 TV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외부 물건에 대한 주민들의 호기심과 동경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실제 사진에 등장한 초코파이의 경우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당시 북한에서 가장 인기였던 과자다. 초코파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자 북



정복규

논설위원

한 근로자들은 지금된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되팔기까지 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국 사회를 알아가는 중요한 정보 수단의 역할까지 했다. 이는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시기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진 한국 제품은 비단 초코파이뿐만 아니다. 드라마, 영화, 가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며들었다. 1990년대 중국을 통해 조금씩 유입되었던 한국 문화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확대됐다.

2000년대 중, 후반부터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됐다. 같은 언어로 전해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감을 불

러일으켰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국 사회를 알아가는 중요한 정보 수단의 역할까지 했다. 이는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법제화해 주민들을 단속했다.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청년 교양보장법', '영양문화보호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특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외부 문화 콘텐츠를 유입,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대북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북한 내부 영상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이 공개석상에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단속에도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세대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향한 갈망은 막을 수 없다. 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20대 여성 역시 탈북 직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한다.

함께 탈북한 또 다른 청년 역시 방탄 소년단 등 세계적으로 인기인 한국 아이돌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지금의 북한 청년 세대는 유년 시절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해온 만큼 기성 세대와는 다른 사고 체계를 형성했다고 평가된다.

시대상에 맞춰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에겐 한국 문화 콘텐츠의 습득과 유포가 더 손쉬운 일이 돼버렸다. 실제 북한 내부 영상에서도 학생들은 아주 작은 크기의 SD카드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담아 보관한다.

북한 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숨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동경을 넘어 북한 청년들의 소비 욕구까지 자극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제품들을 오물이라 지칭하며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콘텐츠는 이미 북한 주민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 사설

## 이재명 포괄일죄 유죄 의미

최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포괄일죄', 즉 '근접한 여러 범죄 행위를 쪽 이어진 하나의 죄'로 보고 유죄라고 했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만 유죄로 본 것이다.

당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라는 발언들을 비슷한 시기에 말했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봐서 무죄 선고 없이 하나의 유죄로 보았다. 검찰이 '허위'라고 지목한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4개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의 발언 3개는 검찰이 주장하는 '교유행위'이다.

앞선 3개 발언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골프 발언'이 유죄인 이상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김문기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유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전북자원봉사센터의 명예 회손

센터장 지인 가게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북자원봉사센터가 비난을 사고 있다. 센터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

다. 도지사가 바뀌었지만 비위와 일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신임 센터장 부임 이후 물품 거래처를 바꿨다. 그런데 거래처는 마트임을 알 수 있는 간판도 없고 둘도 굳게 달려있다.

정상적인 마트라고 볼 수 없지만 센터가 이곳과 거래한 건수만 20건에 이른다. 센터와 새로 거래를 시작한 곳은 센터장의 후배 부부가 운영했는데 창고나 다름없는 곳은 아내가 대표를 맡았다.

주문과 영수증 발급은 아내의 마트가 맡고 납품은 남편 마트가 담당하는 일종의 매출 조개기를 공공기관이 도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2022년 지방선거 때 3선 출마를 준

비하던 전 지사의 선거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센터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신임 지사 취임 후 이사장과 센터장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정기

감사에서는 특정 업체를 바주

기 위해 여러 건의 조개기 수

의계약을 했다.

유령 동아리에 보조금 1,8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을 지원하려고 설립된 기관 성격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비리와

일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센터는 불법적인 행위로 수

십만 자원봉사자회원

큰 명예에 손상을 입혔고 사기를 저

하시켰다. 전북도는 센터장 지

시로 이뤄진 거래가 보조금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

했다. 도의회는 자원봉사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

로 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환골탈피하고 새롭게 출발하

기 마련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